

광주 제2순환도 3-1구간 기로

광주시, 대주주 맥쿼리측에 사업재구조화 최후 통첩

회사측, 통행량 증가 MRG 급감 “공익처분 대상 아냐”

1300억원대 민간투자 사업인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의 사업재구조화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회사 측의 입장차가 커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공익처분까지를 염두에 둔 최후 통첩을 보냈고, 회사측은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C~풍암C, 11.7km)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주(주)에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다.

시행자인 광주순환주는 민간 인프라 펀드업체인 맥쿼리가 75% 교직원공제회가 2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는 1구간 시행자인 광주제2순환도로(주)의 지분 100%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의 지분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2순환도로=돈 먹는 불막걸’이라는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월, 올해 6월에 이어 이달 초 시행자 측에 사업재구조화를 세번째 공식 요청했다. 20여 일의 기한을 준 것으로 시는 “공익처분 등을 염두에 둔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시행자 측이 사업재구조화를 끝내 거부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공익처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즉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면 그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주는 방식은 특혜인 만큼 이를 개선해 사업재구조화를 완료한 1구간의 경우처럼 MRG를 폐지하거나 공익처분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업체 계약과 상납구조 의혹 등도 공익처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시는 사업재구조화나 공익처분을 통해 해마다 막대한 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과도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논의를 요청해 온 상태고, 국내에서 선례가 없는 만큼 법률적 검토도 신중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자인 광주순환주 측

은 “3-1구간은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이패스 신설로 MRG 규모가 크게 줄어 들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고 있다. 2016년까지 한해 50억~60억원에 달했던 MRG는 2017년 34억원으로 반토막난 뒤 올해는 연말까

지 30억원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맥쿼리가 100% 지분을 지닌 1구간과 달리 3-1구간은 주주가 분산돼 있어 주주들의 손실방지도 중요한 문제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광주순환주 관계자는 “최대 20%의 이자율이 인정됐던 1구간과 3-1구간은 이자율이 7%대 중반에 불과

하고, 후순위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통행량이 늘면서 내년이면 임금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익처분 등이 추진된다면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은 수익형 민간사업(Build-Transfer-Operate)으로, 2002년부터 3년 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으며, 민간운영 기간은 2034년까지 30년 간이다.

서은홍 기자



외국인 학생들 초복 맞이 보양식 체험. 초복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여름학교 초복 맞이 보양식 체험 행사'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삼계탕을 먹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수익부터 우선 추징·몰수

돈부터 환수해 피해자에 돌려주는 방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다수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악질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범죄재산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했다.

국가가 사기범죄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적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형사 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악질적·조직적 사기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추적·동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고소·고발이 남용되거나 민사사건이 형사화할 우려 등이 있어 몰수·추

징 대상 범죄를 제한했다.

대상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범인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적인 다중 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수지에 빠진 차량서 30대 숨진 채 발견

영광 한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5분경 영광군 열산면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진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석에서 숨겨있는 A(34·여)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공터에 서 있던 차량이 저수지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주 새마을금고 흥기강도 피해액 4300만원

경북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흥기강도가 침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액은 4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경 영주시 순흥면 흥주새마을금고에 복면에 안경과 모자를 쓰고 흥기를 든 남성이 침입해 직원을 위협한 후 4300만원을 뺏어 달아났다.

흥주새마을금고는 직원 4명(남자 2명, 여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사건 당시 직원들은 점심식사 중이었다. 용의자는 흥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금고 쪽으로 끌고 가 4300만원을 가방에 담은 뒤 도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흥주새마을금고 직원은 “화장실 쪽에서 ‘발그라’ 하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용의자가 흥기로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용의자는 흥주새마을금고 지하 1층을 통해 은행을 빠져 나간 뒤 옆 건물 담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흥주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연남 중요부위 자르려 한 40대 여성

내연남의 외도를 의심해 가위로 중요부위를 자르려 한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A(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4분경 익산시 마동외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내연남 B씨의 중요부위를 자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잠에서 깨 자신을 제지하자 B씨의 등을 가위로 2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1년 넘게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세상인 상대 업무방해 동네 폭력배 구속

경남 고성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A(4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9시에 고성군 고성읍 한 정육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최근까지 고성군 일대 식당 6곳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A씨와 관련한 음주소란 112건 고건수가 무려 1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마친 상가 침입 금품 훔친 40대 구속

영업을 마친 상가 출입문 유리에 벽돌을 던져 파손하는 수법으로 내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A(40)씨를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경 부산진구의 한 미용실 출입문 유리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뒤 내부에 침입해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인 등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복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